

일본의 재생에너지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일본의 에너지정책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유지를 원하는 세력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원하는 세력 간의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음. 본고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최근 동향을 정리하였음.

□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대립구조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 2010년에 책정된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최소 14기의 원자로를 신설하고 원전의 설비이용률을 현행 60%에서 90%로 높인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음(원전확대정책).
 - 그러나 지난 5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칸 나오토 총리는 2010년의 에너지 기본계획을 백지화하고 일본의 에너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제시하였음.
 - 칸 나오토 총리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탈원전의존」을 제시하였으나 각계의 반대에 부딪쳐 정책의 구체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대립구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첫째, 정치세력을 보면, 총리(칸) 및 국가전략실(젠바)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추진과와 경제산업성(카이에다)을 중심으로 한 원전유지파가 대립하고 있음.
- 둘째, 업계에서는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기 등 설비 제조업체와 에너지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IT업체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추진과와 전력업체, 원전설비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 원전유지파가 대립하고 있음.
- 셋째, 경제단체를 보면, 경제동우회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추진과와 경단련을 중심으로 한 원전유지파가 대립하고 있음.
- 넷째, 지자체를 보면, 원전이 입지해 있어서 원전에 재정과 고용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원전 유지파)와 그 주변 지역의 지자체(원전 반대파)가 대립하고 있음.
- 다섯째, 국민여론을 보면, 일본국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위험성을 경험하였고 향후에는 탈 원전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

- 이처럼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현재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정책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일본경제와 국민생활, 나아가 주변국의 에너지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일본에서는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은 실제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전원을 개발하는 정책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새로운 에너지 믹스의 중장기적 로드맵, 대체전원의 가능성과 도입 속도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음.

- 원전을 축소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전원을 개발하고자 할 때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이며 최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음.

□ 재생에너지법안 심의 재개

- 중의원은 2011년 7월 27일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여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 착수하였음.
 - 이 법안은 산업계가 생산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전력회사가 정부가 설정한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재생에너지사업에 민간자본의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가정용 태양광 발전의 잉여전력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부터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이 법안은 매입대상을 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의 전량으로 확대하는 것임.
-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중요한 변수는 매입가격, 매입기간, 그리고 부작용 완화조치인데 중의원 심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될 예정임.
 - 카이에다 경산성 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입가격을 최소한 낮게 설정하려고 있으나 그럴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효과가 떨어진다는 부작용이 있음.
 - 칸 총리는 현행 9%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20년대 초기에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높은 매입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 1kWh 당 태양광 발전은 42엔, 풍력, 중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은 15에서 20엔 정도의 매입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에

너지 다소비업종 및 저소득가구에 대한 완화조치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음.

- 재생에너지법안은 야당인 자민당도 찬성하고 있고 특히 칸 총리 퇴진의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만간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민간 및 자치체의 동향

- 2011년 7월 13일,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사장과 35개 도부현 지사는 「자연에너지 협의회」를 발족하고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2011년 7월 27일, 손정의 사장과 17개의 政令지정도시(대도시) 시장이 「자연에너지 협의회」를 발족하고 대도시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다짐하였음.
-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반면 손정의 사장 등 민간기업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지자체와 민간기업은 중앙정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공동으로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의 중장기 정책방향

- 겐바 국가전략상이 의장인 「에너지 · 환경회의」는 일본의 중

장기 에너지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알려져 있음.

- 전력회사의 지역독점을 재검토
 - 전력회사의 발전/송전사업 분리 가능성 검토
 - 원자력 발전 「국책민영방식」의 재검토(즉 국유화 검토)
 - 핵연료 사이클 등 원전정책의 철저한 검증
 - 원전발전비용, 재생에너지 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비용산정 및 검토위원회」 설치
 - 원전의존도 저감의 로드맵 책정
- 겐바 국가전략상은 이 안을 금년 말에 각의결정한다는 방침이나 그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임.
- 위의 정책방향은 칸 총리가 지지하는 국가전략실을 중심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경제산업성은 이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음.
 - 칸 총리는 기본적으로 경제산업성 등 관료세력을 배제하여 에너지정책방향을 책정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그러나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칸 총리가 과연 이 정책방향을 얼마나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함.

<참고자료>

朝日新聞(2011.7.29). 「減原発へ工程表」.

朝日新聞(2011.7.28), 「自然エネ一躍旗印に」

毎日新聞(2011.7.28). 「最盛エネルギー法案審議再開」